

한국정부의 거짓말

1.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?

아시아연대회의 제언(법적 책임) -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	합의 내용	한국정부 주장	문제점
<p>사실과 책임 인정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·설치하고, 관리·통제했다는 점 -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'위안부·성노예'가 되었고,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-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, 점령지,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,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,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. - 일본군'위안부'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·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-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	<p>“아시아연대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의 관여 인정 - 아베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	<p>아시아연대회의 요구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해자(일본정부 및 일본군)가 불명확하며, 가해의 양태('관여'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, 조직적 행위)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. - 구체적 범죄 사실(위안소의 입안·설치, 관리·통제), 강제성(본인의 의사에 반해, 강제적인 상황) 및 피해의 지속성(현재도 지속)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. - 법 위반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. - 따라서 일본 정부의 '책임 통감'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함. - 기자회견 직후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: 법적 책임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. 따라서 '법적 책임'을 인정한 것이 아님. - 중요한 것은 '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'이지 '아베 정부의 책임 표명'이 아님. 아베 정부가 최초로 책임 표명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.

<p>아시아연대회의 제언(법적 책임) -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</p>	<p>합의 내용</p>	<p>한국정부 주장</p>	<p>문제점</p>
<p>사실과 책임 인정에 기반한 조치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-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- 진상규명 :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/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/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- 재발방지 조치: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.사회교육 실시 / 추모사업 실시 /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. 	<p>“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…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”</p> <p>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,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,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- 정부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배상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실과 책임 인정에 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이름만 내건 ‘대독 사과’ - 사과(오와비)를 공식사죄로 과장 해석 - 일본의 사죄가 “번복할 수 없는”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, 한국 정부의 ‘불가역적 해결’의 의무 부담이 되어버린 황당함. - 사과의 진정성 매우 의문 : 기자회견 직후 아베총리가 "앞으로 위안부문제 전혀 말하지 않는다", "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" 발언. -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음 : 기시다 외무대신, "배상 아니다" 발언 - 일본의 잘못에 대한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본말전도 - 진상규명, 역사교육, 재발방지 조치 등은 언급조차 안 됨

2. 일본정부 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?

1993년 고노담화	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	2015.12.28. 한일외교장관합의 일본측 표명사항	아니다!
<p>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, 위안소의 설치,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,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.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, 그 경우에도 감언, 강압에 의하는 등,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, 나아가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. 또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. ...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, 그 모집, 이송, 관리 등도 감언,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. ...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.</p>	<p>...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</p>	<p>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,</p>	<p>- 가해자(일본정부 및 일본군), 가해의 양태(‘관여’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, 조직적 행위), 구체적 범죄 사실(위안소의 입안·설치, 관리·통제), 강제성(본인의 의사에 반해, 강제적인 상황)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1993년의 고노담화로부터 명백하게 퇴보한 것임.</p> <p>-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.</p>
	<p>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...</p>	<p>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.</p>	<p>1995년과 다른 점은 단 하나 “도의적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인데, 기자회견 직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‘법적 책임’을 명백하게 부정.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.</p>

<p>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를 막론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.</p>	<p>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.</p>	<p>아베 내각총리대신은,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(お詫び)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.</p>	<p>-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.</p>
<p>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, 오히려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하고자 한다. 우리는 역사연구,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,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.</p>	<p>우리는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나라로서는...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,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, 올바르게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동시에,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</p>		<p>- 1993년과 1995년에는 강조되었던 ‘역사의 진실’, ‘역사의 교훈’, ‘미래의 책임’, ‘역사연구’, ‘역사교육’, 미래에의 각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.</p> <p>- 오히려 아베 총리는 “미래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결단”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,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</p>

3. 공동합의문을 두고 딴 소리(다른 해석)

1228 합의문	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	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발언
<p>일본측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. -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 설립,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 - 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 	<p>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"배상은 아니다" <p>"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(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)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"</p>	<p>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"10억엔은 배상금이냐" > "일본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출자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리를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한다." - "그것을 보면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냐"에 > (위안부 피해자의)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 치유금" - 윤병세 장관 지난 해 12.27. 기자들에게 "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"
<p>일본측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. -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·비판 하는 것을 자제함. 	<p>아베 신조 총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약속을 어기면 한국,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끝. 12월 28일로 모두 끝. 더 사죄 하지 않는다. -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않겠다. 일·한 정상 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. 	<p>한국 외교부 당국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"불가역이라 함은 한일 쌍방에 적용되는 것" -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왜곡 등의 망언을 할 경우에는 다시 문제제기 할 수 있다. (중략) 불가역성은 우리가 일본 측에 내준 거라고 볼 수 없다."
<p>한국측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·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,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시다 외상 "(소녀상이)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" -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"철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대전제" 	<p>한국정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"합의된 것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다" - 일본도 그런 전제(소녀상 이전)가 아니라고 부인
<p>한국측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·비판을 자제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시다 외상 "한국이 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신청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"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병세 장관 ;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민간차원 일. 정부는 이래저래라 하지 않는다. - 상호비난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모든 항목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.

4. 합의발표 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 주장

<p>‘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, 상처 치유 방향 확고한 원칙’(12/28 박대통령 대국민 메시지)</p>	<p>피해자 의견 청취 및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고, 수차례 전달된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음.</p>
<p>‘역대 정부 적극 나서지 않음. 우리 정부도 그랬다면 한일 관계 경색 겪지 않았을 것’(15.12.31 청와대 발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정부의 외교적/정책적 실정과 일본정부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 책임을 피해자와 민간에 돌림. - 역대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,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와 일본정부 법적 책임 확인 등 노력. 일본정부 법적 책임 이행 끌어내지 못했으나 현정부처럼 이를 포기하고 최종 타결 선언하는 무책임한 행보 없었음.
<p>‘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’(15.12.31 청와대 발표)</p>	<p>1993년 「고노담화」, 1995년 국민기금 당시의 내각총리대신 ‘사과의 편지’보다 진전 없을 뿐만 아니라, 오히려 퇴보한 것임.</p>
<p>‘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유언비어’(15.12.31 청와대 발표)</p>	<p>합의 전 평화비(소녀상) 이전 검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라고 지속 주장하던 외교부가 결국 합의에 이를 명시. 이외에도 일본발 보도 부인하던 정부 주장이 합의 통해 거의 사실로 드러나 오히려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정부였음</p>
<p>‘앞으로 어떤 정부도 손을 놓게 될 것,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 없게 될 것’(15.12.31 청와대 발표)</p>	<p>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협박성 발언. 정부의 직무 유기와 무능 선언</p>
<p>‘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음’(15.12.31 청와대 발표)</p>	<p>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폭로와 진실규명을 비롯 유엔 및 국제기구 조사/ 권고, 국제적 우호 여론 확산 등 거의 모든 성과가 피해자당사자들과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온 것.</p>
<p>‘협의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, 2015년에만 외교부가 15차례 방문, 지방도 방문, 여가부 T/F에서 의견 수시 청취’(1.5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대협, 정부 차원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고 외교부 관계자가 할머니들한테 명절인사 하겠다고 씬터 방문한 적만 있음. 그것이 의견 청취인가?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호소 - '일본군'위안부'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창원시민모임', "외교부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왔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. 우리는 이번 협의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들어본 적이, 사전협의한 적이 없다" - T/F 참여학자들, 여가부 T/F는 백서 편찬 조직, 한.일협상과 무관